

악재 만난 민주당 재보선 타격

또 '돈 공천'... 전승가도 먹구름

지난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자금을 주고 받은 전 민주당 중앙당 고위 당직자와 전 민주당 군수 후보가 26일 검찰에 진격 구속됨에 따라 전남지역 10·25 보궐선거 구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 보궐선거에서 전승을 노리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사건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돈 공천이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피할 수 없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당과는 무관한 개인 채무”

26일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 “지난 지방선거 당시 당내에서 여러차례 이번 문제에 대해 조사했으나 개인적인 채무 관계였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5개월 전부터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서 구속을 결정할 때 대해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당시 전남지역 민주당 군수 후보였던 장씨로부터 돈을 받은 중앙당 고위 당직자 김씨는 공천에 영향을 끼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돈 공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앙당 당직자 김씨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가기 위해 군수 후보였던 장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 내부에서 문제를 삼자 즉시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조재환 전 사무총장이 공천 현금을 받다가 구속된 적이 있는 데다 이번에 구속된 김씨도 당시 기획조정위원장을 맡아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한 고위 당직자였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던 장씨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고위 당직자인 김씨에게 2억5천만원이라는 고액을 단순히 빌려줬느냐는 것이다.

“대가없이 2억5천만원을...”

특히 장씨가 민주당 고위 당직자였던 김씨에게 돈을 빌려준 시점이 공천 전이라는 점에서 공천 현금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편의를 위한 대가성 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민주당 고위 당직자들의 돈 거래가 김씨에만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고위 당직자인 S씨도 연관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파장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전남지역의 3곳의 보궐선거 가운데 2곳

(화순, 해남·진도)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군수의 실정법 위반으로 처리되는데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군수 후보와 고위 당직자가 부적절한 돈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공천 현금’ 진위 여부를 떠나 민주당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눈길이 굵직해졌다.

검찰 수사 확대 가능성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10·25 보궐선거에서 ‘돈 공천’ 의혹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높아 민주당에는 악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고위 당직자의 부적절한 돈 거래에 대해 민주당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우선 진심으로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졌던 돈 공천 의혹이 현실로 드러났다”며 “검찰은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말을 밝혀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기획조정위원장=사무총장 산하 기관의 국장급 장으로 당무 전방에 대한 조정 및 당 현안 기획 업무를 통괄하고 있다. 서열상으로 높지 않으나 직무 특성상 당 요직으로 꼽힌다.



전효숙 헌재소장 인준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26일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안상수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자 선병렬 열린우리당(왼쪽) 의원과 니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전효숙 청문회 즉각 시행하라” 여성계 인사들 촉구

법조계·학계·시민단체에서 활동중인 여성계 인사 20명은 26일 “국회 법사위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즉각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헌법과 국회법 조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게을리한 국회에 있고, 헌법관련 문제를 치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정쟁의 빌미를 제공한 대통령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관련 국가기관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 절차조차 원천 봉쇄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헌정의 파행을 야기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여성계 인사들의 성명에는 강기원·김덕현·황상성 변호

사, 박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등이 서명했다.

전 후보자의 고향인 전남 순천지역 여성들이 헌재 소장의 공백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순천YWCA, 순천시 여성농민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순천지부 등 30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순천여성활동가연대(이하 활동가 연대)는 이날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소모적인 정치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헌재 소장 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후분양 민간 확산 안돼”

건교부, 서울시 강력 비판

서울시의 민간주택 재정비 사업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 의무화 요구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건설교통부는 “아직 서울시로부터 법·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받지 않았지만 민간주택 방식의 뉴타운 사업에도 후분양제 적용을 의무화한다면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뉴타운 사업지구 등 도심 노후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연간 1만~1만7천가구로 이중 30~40% 정도가 선분양 방식으로 일반분양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80%의 공정을 달성후 주택을 분양한다면 서울시내에서의 주택 공급 물량은 사라지고 건설업체의 분양사업 참여 저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나오는 분양주택은 입주자 모집패선분양을 할 수 있다고 규정, 사업시행자에 분양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남·진도 채일병 화순군수 정완기 신안군수 최영수

민주당 10·25재보선 후보 확정

민주당은 26일 중앙당사에서 대표단 회의를 열고 10·25 전남지역 재·보궐선거에 나갈 민주당 후보들을 최종 확정했다.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는 채일병(59) 전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화순군수 후보에는 정완기(64) 전 전남도의원, 신안군수 후보에는 최영수(46) 전 한국관광공사 서남지사장이 각각 확정됐다.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채일병 후보는 차관급인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등 고위 공직 생활을 거쳐 현재는 대불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중이다. 채 후보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 경선에 참여한 바 있으나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으로 옷을 바꿔 입은데다 13대 1의 치열한 공천 경쟁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민주당 공천을 받아 의외라는 평가다.

정완기 화순군수 후보는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금융결제원 감사 등을 역임하고 민주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후보는 민주당 정통 당원 출신으로 지난 2004년 6·5 화순 군수 재선거에 출마했으나



채일병 후보



정완기 후보



최영수 후보

92표차로 무소속 이영남 후보에 석패한 뒤 절치부심 끝에 다시 도전 기회를 잡았다.

최영수 신안군수 후보는 한국관광공사 서남지사장과 목포과학대학 겸임교수를 역임한 신예. 최 후보는 민주당이 당초 내정했던 후보를 교체하는 과정에 공천을 따내는 목숨을 바쳤으며 참신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후보 선정은 공특위와 대표단회의에서 참신성, 당성 가능성, 현 지역론, 당원들의 의견, 현지실사 결과를 종합해서 후보를 선정했다”며 “오는 28일 오전 중앙당에서 공천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

DJ, 전남대서 名博 학위

내달 11일 특별강연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남대에서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전남대는 “다음달 11일 오전 대학 대강당에서 김 전 대통령에게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한반도의 현실과 4대국’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대는 김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과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해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민주·인권과 평화 애호정신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천했으며 저술활동과 문화산업 육성에도 앞장 선 점 등을 높이 평가해 명예 박사학위를 주기로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정치인이나 개인으로서 철학적 사유를 기반으로 계우집을 전했으며 ‘내가 걷는 70년대’(범우사,1970), ‘김대중 옥중 서신’(청사,1984), ‘행동하는 양심’(금문당,1985), ‘대중경제론’(청사,1986), ‘민족의 새벽을 바라보며’(일월서각,1987),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김영사,1993), ‘나의 길 나의 사상’(한길사,1997) 등 저서를 냈다.

김 전 대통령의 특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전남대 학생의 경우 총학생회(062-530-0580)로, 일반인은 전남대 사회과학대(062-530-2604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초청장을 받을 수 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일본 ‘DJ 납치’ 재수사

한국에 곧 조서 요구



이(產經)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의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납치사건에 대해 당시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범행이라는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범행 가담자들의 조서를 한국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온 한국의 조사위원회가 중앙정보부의 조직적 범행으로 한국 정부의 개입을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종합, 조만간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찰은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교 채널이나 국제 형사기구를 통해 진상조사위의 조서를 요구, 내용을 정밀 검토한 뒤 당시 주일대사관 1등 서기관인 김동운 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산케이는 밝혔다.

일본 경찰청은 당시 김 서기관의 출두를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에 의해 거부됐었다. 당시 한국측은 김 서기관이 중앙정보부 요원 인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통보를 했었다. /도쿄=연합뉴스

전남대학교 2007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7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학과와 모집인원을 안내합니다.

학과	학위	모집인원	응시자격
행정학과	석사	10명	대학원생
법학부	석사	15명	대학원생
경영학과	석사	12명	대학원생
교육학과	석사	8명	대학원생
공공정책학과	석사	10명	대학원생
문화정책학과	석사	10명	대학원생
지역발전학과	석사	10명	대학원생
환경정책학과	석사	10명	대학원생
국제지역학과	석사	10명	대학원생
문화유산학과	석사	10명	대학원생
문화정책학과	석사	10명	대학원생
문화유산학과	석사	10명	대학원생
문화정책학과	석사	10명	대학원생
문화유산학과	석사	10명	대학원생
문화정책학과	석사	10명	대학원생
문화유산학과	석사	10명	대학원생
문화정책학과	석사	10명	대학원생
문화유산학과	석사	10명	대학원생
문화정책학과	석사	10명	대학원생
문화유산학과	석사	10명	대학원생

전남대학교 대학원 입학처